

## 외환위기의 발생원인과 IMF시대의 한국경제

정 명 기  
(鄭明基)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 III. IMF자금 지원조건
- IV. IMF구제금융 이후 한국경제  
(1998년도 경제전망)
- V.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과제

### I. 들어가는 말

한국경제는 지난 30여년간 압축성장을 통해 구미 산업국가들이 200여년의 산업화 과정을 따라잡는데 성공함으로써 경제기적을 이룩하였다. 동아

시아 네 마리 작은 호랑이의 선두주자인 우리나라 경제는 후진국 경제발전 모델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되었다.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반도체 생산 세계 3위,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등과 같은 가시적인 실물경제지표가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6.25전란의 폐허 속에서 경제규모 세계 11위라는 경제대국을 건설하면서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열었고 선진국가들의 경제사교클럽이라고 일컬어지는 OECD에도 가입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에 거침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자신감은 IMF구제금융을 받음으로써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다. 경제주권의 상실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가혹한 규제를 받으면서 IMF로부터 외환을 긴급 수혈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으로까지 이르렀던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위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단지 우리 모두가 국민소득 1만달러라는 거품속에서 우리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자각증상이 없었다는 것 뿐이다.

외환부족으로 인한 대외지불 불이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IMF의 협조요자는 우리 경제의 목줄

을 옥죄는 무리한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글은 이같은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외환 위기의 발생원인과 IMF의 협조요건 조건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서술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진단도 갖가지이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경제는 高금리, 高임금, 高환율 등의 3高와 자금難, 인력難, 기술難, 수송難 등의 4難이 풀어진 실타래처럼 한데 엉켜져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록 우리 국민들의 저축률이 세계에서조차 아주 높은 수준에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 투자율을 밀돌고 있어 만성적인 시중자금의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금융제도의 낙후성과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자본비용을 상승시켰다.

1996년 국내 총 투자율은 38.6% 였으나 총 저축률은 34.6%에 불과해 부족한 자금의 해외 차입이 불가피하였다. 이처럼 만성적인 자금부족은 높은 수준의 금리 형성에 根源을 제공한 셈이다. 따라서 시중금리는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는 13%대

로 미국의 시중금리보다 2배나 높고, 일본에 비해서는 6배, 독일과 대만보다는 3배, 싱가포르보다는 4배나 높은 이자를 지불함으로써 경영압박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였다(유화선, 1996).

그러나 이처럼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원의 절대다수를 소수의 재벌기업들이 상호지불보증제도를 통하여 독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가중되어졌고 연쇄 기업도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경유착에 의한 금융자원의 독식과 관치금융의 틀속에서 주먹구구식 경영에 일관함으로써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쌓인 낙후된 금융시장이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기능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한강의 기적에는 장시간 저임금이라는 근로자의 땀이 베어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노사관계의 고착과 정의롭지 못한 소득분배가 정치적 민주화와 맞물려 80년대 말부터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갈등 증폭과 임금의 급상승이 이루어졌다. 특히 3D현상으로 인한 노동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임금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졌지만 협조적 노사관계 정착의 실패와 기업의 경영합리화 실패 등으로 생산성 증가보다 빠른 임금 상승률을 기록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임금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허약한 중소기업들은 高임금과 인력難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1986~1990년 사이에 임금 인상률은 년 평균 17.9%이었고 1991년에서 1994년 사이에는 14.7%

를 기록함으로써 1995년 시간당 인건비가 선진국인 영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한국의 시간당 인건비는 12.77달러인데 비해 영국은 9.91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유화선, 1996).

80년대 중반이후 3低현상에 의한 무역흑자와 부동산 경기 등에 의한 경기팽창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통화인 원貨의 통화가치는 높게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1달러당 800원대를 유지했던 고환율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해외이주를 강제하여 산업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하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원화는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확산시켰고 고가의 내구소비재의 수입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였다. 1996년 237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1997년에도 10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 237억달러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나라 전체가 벌어들인 것보다 약 21조를 더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수용으로 수입한 식료 및 소비재의 가격이 무려 150억달러에 달해 가계살림이 빚잔치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1997).

압축성장기의 정부 역할이 개방화·국제화라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에 경제논리가 함몰됨으로써 정부정책은 방향을 잃게 되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수송난은 가중되어졌고 기

업들은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필요한 수송, 보관, 포장 등의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수출물량의 경우 과도한 물류비용의 부담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떨어뜨릴 수 밖에 없고, 정확한 납기준수가 어려워 비가격경쟁력까지 약화시켰다. 한국 제조업의 물류비용은 총 매출액중 14.3%를 점하고 있어 일본의 8.84%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은 실정이다(유화선, 1996).

80년대 부동산 경기에 따른 높은 지가상승률은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가져와 부에 대한 사회·경제윤리적 정당성이 붕괴되면서 부에 대한 경시풍조와 과소비를 만연시킴으로써 노동윤리를 급속히 마모시켰다. 아울러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장부지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임으로써 국내 공장건설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공장용 부지의 평당 가격이 한국은 286,000원인데 비해 싱가포르는 3,000원, 미국은 16,000원, 영국은 5,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유화선, 1996).

이러한 구조적인 위기의 원인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는 구조조정에 무책임하게 대응하여 왔다. 재벌들은 계열사간 지불상호보증제를 통하여 막대한 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하여 몸체를 불리는데 급급하였고 재벌에 대한 정부의 산업정책은 정경유착 때문에 방향을 잃고 표류하였다. 부채비용 평균 400%, 신규투자 차입금의존도 80%, 식당운영에서 중화학공업까지가 「부도유예」에 들어간 「주식회사 한국」을 이끌고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실이다(김기천, 1997).

그러나 정부는 차입경영과 중복투자 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조정은 커녕 재벌의 독점적 전횡을 막지도 못한채 재벌의 이해에 끌려 다님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고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금융시장의 낙후성, 교통, 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실패,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부에 대한 경시풍조에 따른 과소비 풍조 그리고 정부의 정책 실패, 재벌의 차입 및 선단식 경영 등이 실타래처럼 한데 엉켜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종합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무리하게 외국자본을 차입하여 재벌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왔으나 내수시장의 급속한 악화와 수출 경쟁력의 상실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도가 잇따르자 위기는 가시화 되었다. 국제기준으로 무수익 자산(부실여신)이 97년 9월말 현재 전년동기 100% 증가한 32조원(GDP의 7.5%)을 기록하였다. 동시에 주가의 하락은 은행보유주식의 가치를

하락하여 은행의 순자산 가치도 떨어졌다. 이러한 사태는 취약한 은행시스템 때문에 더 악화되어졌고, 시장원리 부족과 가격 및 관리위험에 대한 경험부족, 신중하지 못한 정부의 은행감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 해외자금 조달이 급속히 위축되어졌다(IMF, 1997). 한편 태국으로부터 시작한 동남아 외환위기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유입을 억제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초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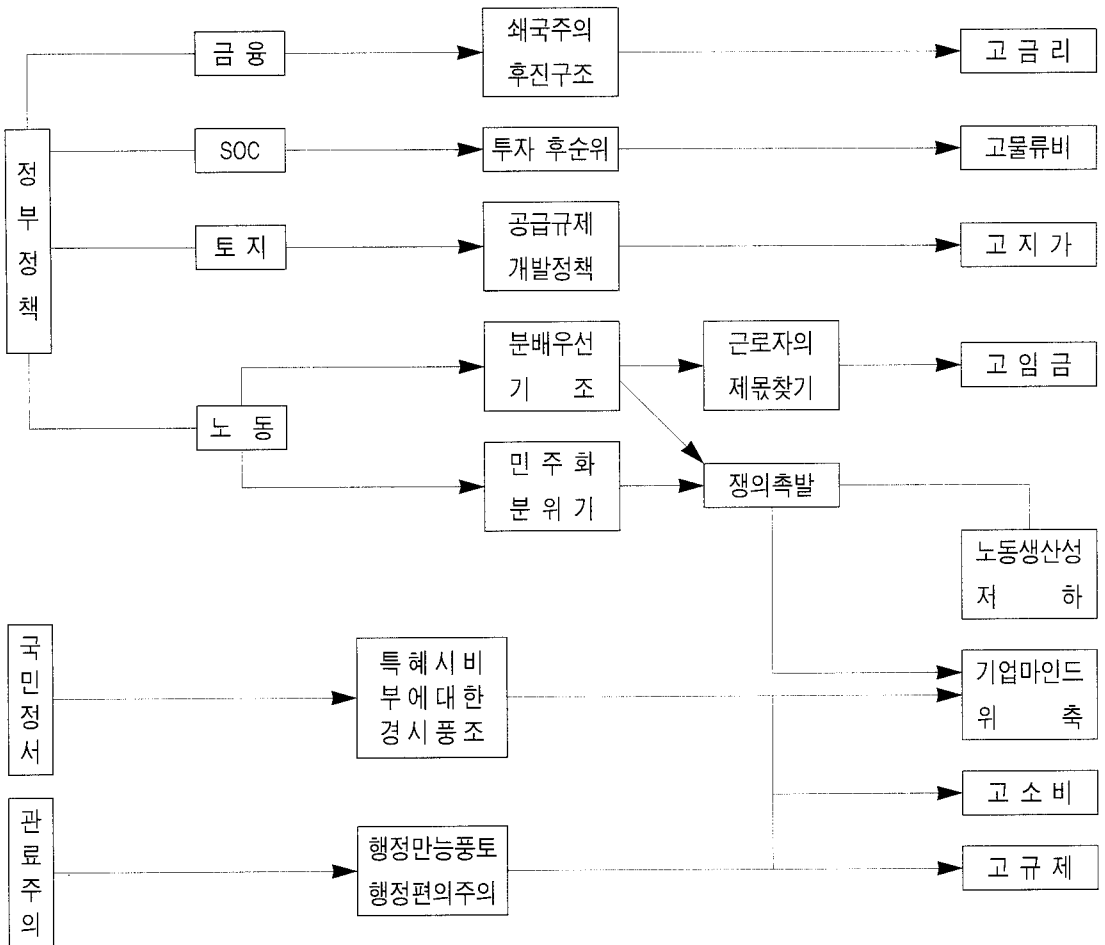
### III. IMF 자금지원조건

한국 정부는 97년 11월 21일 외국인의 급격한 투자회수와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난으로 인해 외환시장이 파국에 이르자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키로 결정하고 12월 3일에 자금도입 조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IMF의 한국 경제 신탁통치가 시작되었다. IMF는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 1

〈표 1〉 IMF 구제금융 도입규모

도입시기	도 입 자 금 규 모	
1 차 도 입	IMF(3년만기 대기성 차관)	210억 달러
	IBRD(세계은행)	100억 달러
	ADB(아시아개발은행)	40억 달러
	총 액	350억 달러
2 차 도 입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200억 달러	

자료 : 재경원, IMF자료



〈그림 1〉 한국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차로 350억달러를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200억 달러를 추후에 지원하겠다는 자금공여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요구하는 조건은 대체로 3가지이다. 즉 ① 재정·통화긴축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과 물가안정, ② 금융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③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IMF 역시 금융기관인 관계로 지원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조속한 상환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거시경제정책들을 강도높게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 중 첫번째 조건은 IMF가 전통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 각국 경제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정해진 기준을 확일적으로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성장률을 3%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정부재정의 10% 감축과 흑자를 유지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3% 수준으로 축소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GDP의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 IMF 거시운영의 기본 골격이다. 총 유동성(M3) 증가율을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1998년에는 9%로 하는 초통화긴축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회사채 수익률이 20%가 넘는 고금리 행진이 지속되어질 것이 분명하다. 긴축재정정책의 기초는 흑자재정을 의해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세수 확대를 위해 조세율을 인상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경유·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의 인상과 과세기반 확대로 조세수입을 3조3천7백억원 증액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과 일반행정비 등의 경상지출을 삭감하여 3조6천억원의 세출을 삭감토록 권고하고 있다.

두번째 조건은 금융시스템의 신뢰회복을 위해 부실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선고에서부터 부실채권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필요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고 까다로운 내용으로 되어있다. 부실중금사의 업무정지, BIS 자기자본비율 8% 미달 국내은행들의 제3자인수 및 합병 등을 허용하도록 되어있다. 즉,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IMF의 요구는 건전한 금융기관과 불건전한 금융기관의 격리와 부실 금융기관 구제비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실 금융기관의 운영책임을 주주에게도 지움으로써

책임경영을 확립토록 하였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계제도 개선도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대형금융기관의 국제공인기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실물부문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도 매우 폭넓게 이루어졌다. 외환시장에 관해서는 일일 환율변동폭 제한 철폐와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완전 개방 및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액 50% 확대가 요구되었다. 국내시장에 대한 개방도 확대되어 수입 다변화 제도가 철폐되어 일본제 상품의 수입이 사실상 완전 자유화되어지게 되었고, 미국과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었던 자동차 형식승인제도도 철폐되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제한분야도 대폭 완화되어져 이제 국내시장은 완전히 빗장을 열어 놓은 꼴이 되었다.

한편 실물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최근의 외환위기가 대기업 부도에서 비롯한 만큼 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투자사업 재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M&A관련법의 재정비도 요구하고 있고 차입경영의 수단으로 이용된 상호지불보증제도의 철폐와 결합채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총수 1개인의 전횡적 경영권 독점을 막기 위한 근대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요구하고 있어 재벌해체에 강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선박 등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지니는 산업을 거느린 재벌에 대한 선

〈표 2〉 IMF 구제금융 지원조건

항 목	지 원 조 건	
거 경 제 운 용	성 장 륜	▷ 30% 수준
	경상수지적자	▷ GDP기준 1%(약 50억달러) 이내
	물 가	▷ 5% 이내
	재 정	▷ 세출예산 7조5천억원 축소(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의 약 10%)
	세 율	▷ 부가세, 특소세, 교통세 등을 통한 세수확대
	노 동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금 리	▷ 통화긴축으로 인한 일시적 금리상승 허용
금 융 개 혁	부실종금사처리	▷ 9개 종금 업무정지(내년 3월까지 정상화 안될 경우 인가취소)
	부실금융기관처리	▷ BIS 자기자본비율 8% 미달 시중은행의 제3자 인수 및 M&A 유도
	외국은행허용	▷ 증권사 및 외국은행의 자회사 설립(98년 중반까지 허용)
	금 융 개 혁 법	▷ 연내 처리 ▷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 통합감독기구 설립
	회 계	▷ 대형 금융기관의 국제공인기관 회계감사 의무화
	정 책 금 융	▷ 폐지
자 분 및 국 내 시 장 개 방	자 본 시 장 전 면 개 방	▷ 단기금융시장개방, 상업차관 도입 자유화 추진 ▷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연내 종목당 25%→50% 확대 내년에는 55%로 추가확대
	국 내 시 장 추 가 개 방	▷ 수입 다변화제도 포기 ▷ 자동차 형식승인제도 폐지 ▷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 추가 허용
기 업 구 조 조	구 조 조 정	▷ 대기업 과도차입을 시정하기 위한 기업구조 개혁 ▷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 퇴출과 적대적 M&A 허용 ▷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 한도 축소 ▷ 부실기업 구제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원 배제
	경 영 의 투 명 성 강 화	▷ 계열기업군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 ▷ 소액주주와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대주주 견제기능 및 공시제도 강화 ▷ 초과차입금 이자의 손비 불인정

자료 : 재경원

전국의 경제심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저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리해고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 IV.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경제 : 1998년도 경제전망

가혹하리 만큼 엄격한 IMF의 구제금융조건은 이처럼 거시적 경제운영에서부터 기업의 소유구조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들의 BIS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여신자금을 회수하자 기업들의 흑자도산이 줄을 잇고 수출업체는 수출입 환율음 할인중단으로 수출입마저 마비되어가고 있다. 금리는 천장부지로 높아가고 기업의 도산사태와 감량경영으로 실업이 사상 최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IMF의 한파가 연초부터 세차게 불어오고 있다. 따라서 IMF의 요구가 금년 우리 경제에 구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금융시장의 경우 IMF 구제금융 실시 이후에도 즉각 안정되지 못하고 한동안 불안한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IMF 지원자금이 한꺼번에 유입되지 않고 계약조건의 준수여부를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유입되는 데다 대외신인도가 곧바로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외환유동성 부족이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렵다.

최근들어 2000원까지 치솟던 원화 환율이 1500원대에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제 채권은행단과 단가외채의 상환연기가 합의되어야 하고 외환표시국채의 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계속적으로 IMF 요구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때 외환위기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역시 IMF로부터 고금리 유지를 권고받고 있고 은행의 신규대출 억제로 극심한 자금난 때문에 당분간 20%대의 고금리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커지고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둘러싼 혼란과 예금이탈 우려로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영이 더욱 보수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져 쉽게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환율 상승세가 멈추고 기업의 자금가수요가 가라앉으면서 금리는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15%선에 머무를 전망이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긴축이 지속될 것인데다 저성장과 고물가의 경제여건, 부도유예협약 등 한계기업의 보호장치가 없어지면서 기업의 연쇄부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권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유지의 필요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환율급등, 고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실물경제는 저성장·고물가 기조를 1~2년 가량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통화증가율(M3기준) 9%, 물가상승률 5%, 통화의 유통속도 15%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하고 있어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원화절하의 영향으로 수출이 호전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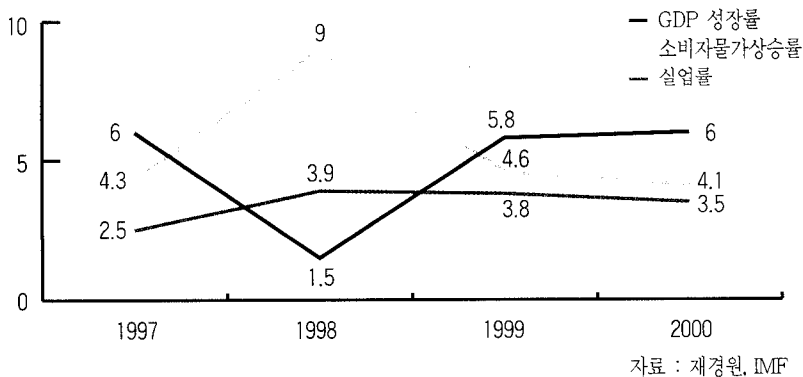
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위축되고, 수입물가 상승압력이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 역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과 고금리, 부도유예협약 철폐 등 기업경영 환경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변모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대외 신용도 하락과 국내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건축재정 운용으로 정부의 각종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크게 축소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건설투자 감소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원화절하로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화절하를 이유로 수출단가 하락 압력과 동남아 시장의 외환위기로 인한 수출시장의 축소로 인하여 높은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 회복에 따른 수출호

조와 내수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로 무역수지는 6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역외 수지 적자로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률의 저하, 기업의 도산과 감량경영의 확산 그리고 정리해고제의 도입 등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실업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불안정 고용도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고용불안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년도 예상 실업자수는 약 백만명에서 백십만명 선으로 추산된다. 경기회복이 내년부터 이루어진다고 해도 고용흡수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업인구 백만명 시대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IMF와 재경원이 합의한 금년도 주요 거시경제운영 지표를 요약해 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IMF체제의 주요경제지표 전망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IMF 거시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의 여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한국경제를 필요이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일 IMF 권고대로 통화증가율을 9%로 유지하게 되면 성장률은 마이너스 3%가 될 전망이 불가상승률 5% 달성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홍순영, 1998).

따라서 정부는 IMF와의 재협상을 통하여 거시경제 지표를 수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보다 신축적인 경제운용이 가능해졌다. 재협상 내용을 보면 ① 경제성장률은 내수부진과 재정긴축을 감안하여 당초 3%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② 물가 상승률은 수요위축에도 불구하고 환율급등에 따른 cost-push요인 반영으로 9%대까지 상승이 불가피하며 ③ 경상수지는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증가와 내수위축으로 인한 수입감소에 힘입어 흑자전환이 가능하며 ④ 환율은 외환시장 불안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연평균 1,300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⑤ 금리는 기업구조조정 압력 유지와 해외자본 유입을 위해 2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수정 합의안은 전체적으로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해외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금리수준을 높게 유지하겠다는 점은 해외 채권 은행단의 이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1998년 한국경제는 IMF 쇼크에 의해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고 물가는 상승하는 경기침체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백만명

실업자 시대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고용불안이 사회 전체적인 불안으로 확산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과 같은 제도적 개혁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이 심화될 소지도 많아 경제위기 만큼 이해당사자간의 대립도 첨예화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고물가, 고실업, 고금리의 3고로 국민소득은 1만 달러에서 8천달러로 뒷걸음질 할 것이고 조세부담까지 가중되어져 도시가계 월평균 소득은 1997년 215만원에서 금년에는 183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가계소득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강태욱·오정훈, 1997). 이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IMF하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마저 크게 마모될 전망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V.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과제

IMF 쇼크 이후에 경제와 사회 전반에 침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IMF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기국면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의 불안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수개월 동안이 외환위기를 해소하고 경제를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현재의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길 밖에 없어 보인다.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지원, 외화표시 국채발행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대외신인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외화유출, 대외채무의 연장으로 등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높은 금리의 외화를 차입하여 보유고를 무리하게

채우려고 할 경우 장래 원리금 상환에 큰 부담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신인도를 회복하여 대외채무를 장기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의 신용등급을 높여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해외자금의 유입을 가능케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IMF 협약준수를 지속적으로 천명하면서 가시적인 조치를 조기에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부실 금융기관의 외국계예의 매각, 우수 외국기업의 국내유치 등을 통해 확실한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현재의 금융불안은 부실 채권에 대한 처리원칙이 불분명한 가운데 책임있는 결단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초래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 기업, 예금자 등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신용공황이 전전한 기업까지도 부도나게 하는 상황이며 장기화될 경우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부과하고 대기업들의 업종전문화를 강도있게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고 실행해야 하며, 정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제 세계 초일류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제도의 개혁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재벌기업의 체제는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며 급격한 체제개편

요구는 자칫 활력을 저하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이제 기업 스스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행태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체제개편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IMF시대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리해고제의 도입도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와 함께 도입이 불가피하다. 인력재배치, 작업시간 단축, 임금삭감, Job Sharing 등으로 해고를 최소화해야 하고 근로자는 임금삭감, 복리후생 등 작은 불만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하며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기업 생존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고통분담을 대전제로 IMF시대의 고통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혁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고통분담의 정신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자기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집단적·계층간 이해대립이 일어날 경우 이를 조정하고 설득하여 대타협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정부가 솔선하여 개혁에 의한 고통을 감수하고 이해집단들의 구조개혁 동참을 독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한 수준의 실업을 감수하고 고물가를 절약으로 이겨내면서 노사정 협력체제의 구축과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IMF 졸업식은 그만큼 일찍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IMF 권고에 따른 구조조정이 성공을 결코 보장하여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중심 축을 잃어버리고 타율적으로 이끌려간다면 우리 경제는 개방화 시대에 버랑 끝에까지 몰릴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하

루속히 IMF라는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적 화합을 바탕으로 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쉽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이 재구축되는 이 시대에 한국이야말로 새로운 국가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을 맞고 있는 셈이다. **열린중남**

## 참 고 문 헌

- 강태욱, 오정훈, “일인당 소득 8천달러로 뺏겼음”, 주간경제 444호, LG경제연구원, 1997, pp.6-10.
- 강호병, 전 진, “IMF구제금융 이후 한국경제 저성장+고실업+고금리”, 주간경제 443, LG경제연구원, 1997, pp.1-5.
- 권순우, 오승구,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 서울:삼성경제연구소, 1997.
- 김기천, “시험대에 오른 아시아 모델”, 조선일보, 1997. 11. 27.
- 유화선, “고비용 벽을 깨자”, 한국경제신문, 1996. 9. 9.
- 이한득, “IMF금융 빅뱅 시동”, 주간경제 444호, LG경제연구원, 1997, pp.1-5.
- 재경원, IMF자금지원 합의내용, 서울:재경원, 1997. 12. 5.
- \_\_\_\_\_, IMF 및 주요 선진국자금조기지원, 서울 : 재경원, 1997. 12. 24.
- \_\_\_\_\_, IMF자금(제4차) 인출승인 및 주요 합의내용, 서울:재경원, 1998. 1. 9.
-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서울:통계청, 1997.
- 홍순영, IMF거시정책 프로그램 평가 및 98년 경제 전망, 서울:삼성경제연구소, 1998.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Korea Request for Stand-By Arrangement*, Mimeo, December 3, 1997.